

민주노총 총파업에 찬성표를!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스타시스 쿠벨라키스
시리자를 둘러싼 논쟁

8~9 면

공무원연금
양보안 철회하고
'실무기구'에서 나오라

4, 16 면

공동전선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10~12 면

새로운
여성주의의 등장과
마르크스주의

6~7 면

사드 배치 시도
중단하라

13 면

지제크와 이슬람주의를 둘러싼
장정일 vs 이택광
논쟁이 놓친 점

15 면

세월호
인양하라

2 면

세월호 참사 1년을 돌아보면서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김지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3백4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는 여전히 진도 앞바다에 묻혀 있고, 참사의 진실도 온전히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도, 국정원 실소유 의혹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재판에서 밝혀진 것만 봐도, “침몰은 선장이 시켰지만 참사는 정부가 만들었다.” 참사 직후 해경 123정만이 도착했고, 스스로 배에서 탈출한 승객들만 건져 올렸을 뿐이었다.

바다에서 직무를 유기한 경찰은 육지에서 바빠 움직였다. 경찰은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미행했다.

결국 5월, 희생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나 다름없다’는 KBS 보도국장에게 항의 방문을 하고, 청와대로 향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영정 사진을 끌어 안고 밤을 꼬박 새웠다.

그 시각 박근혜는 청와대에 앉아 세월호 참사로 경제가 위축돼선 안 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다시금 드러난 순간이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 요구

희생자 가족들은 대통령까지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희생자 가족들의 국회 농성으로 국정조사가 겨우 시작됐지만, 새누리당의 방해가 이어졌다.

7월 말 희생자 가족들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서명 운동에 나섰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독립적 수사기구를 마련하고, 진상 규명을 바탕으로 안전 사회의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 특별법의 골자였다. 참사의 책임자들을 소환·수사·기소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면 진실 규명은 요원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와 맞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부가 특별법 요구를 수용할 리 만무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거리로 나가 특별법 통과 서명을 호소했고, 5백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가족들은 대학과 공장 등 곳곳을 찾아다니며 진실 규명의 힘을 모으고자 했다. “도로 위의 세월호를 막자”고 나선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악한 박근혜 정부는 “민생법안”으로 포장한 온갖 규제 완화 법안을 쏟아냈다. 9월 박근혜는 사실상의 여야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새누리당을 단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 방해 공범이었다. 새정치연합은 등원에 몸이 달아 희생자 가족들에게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 요구를 내리라고 압박했다. 운동 내 일부 온건파 리더들이 이런 새정치연합의 눈치를 보거나 의존하려 한 태도는 운동의 성장에 장애가 됐다.

진실을 인양하라

11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수사기구의 독립성과 수사권·기소권이 빠진 누더기 특별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이 누더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유가족들은 4·16 가족협의회를 꾸리고 세월호 인양·실종자 수색·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적 증거 보전과 실종자 수색을 위해 세월호는 조속하고 온전히 인양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배상·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학생들도 도심 행진을 비롯해 곳곳에서 1주기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가 큰 규모로 열려 박근혜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 항의의 뜻을 분명히 보여 주자.



“실종자 가족은 정말로 유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구조를 방기한 박근혜 정부는 실종자 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2월 14일 진도에서 열린 ‘실종자 귀환 기원제’.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3월 27일 해수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애초 요구보다 인력과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고 정부 파견 공무원의 통제를 강화했다. 가족협의회는 “간섭령”이라며 전

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3월 23일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단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특조위 내부 자료를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등에 유출했다는 것

이 밝혀졌다.

특조위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마련 요구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무엇인가

청해진해운은 노후한 선박을 수입해, 객실을 늘리며 선박 개조를 하고, 평형수를 빼고 화물을 과적했다. 선원들 안전 교육엔 돈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청해진해운이나 유병언 일가가 특별히 더 부패해서만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 이윤 증대에만 골몰한다. 당장 돈이 안 되는 안전 관련 조처들이 박근혜 정부와 기업들에겐 “암 덩어리”로 치부된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고질병

인 부패 문제도 밝히 드러냈다. 기업들은 이윤 경쟁에서 더 유리하려고 국가 관료들과 연줄을 만드는 데에 애를 쓴다. 그리고 관료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이익을 따로 챙긴다. 최근에도 이명박 정부가 기업 29곳에 2천8백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크게 일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이윤 활동을 도우려 이런저런 조치를 취한다.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 운운하며 각종 안전 관련 규제를 없애고 안전 관련 예산을 축소했다. 반면에 국방

비에겐 아낌없이 돈을 썼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노후한 고리 원전 재가동을 결정하고, 밀양에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등 동아시아를 더한층 불안정하게 만들 일도 벌이며 한다.

소수의 지배자들은 이런 결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다수 노동계급은 위험과 고통을 짊어지게 된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다수의 필요를 우선하고, 민주적 운영 원리로 작동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지난 투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세월호 참사가 이 사회에 미친 파장은 엄청나다. 1945년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20·30·40대가 세월호 참사를 꼽았다.(2014년 12월, 〈한겨레〉)

운동이 잠시 소강 상태인 듯 보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급격히 깊어지면서 지배계급의 갈등 등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진실이 드러나거나 하면 다시 한 번 행동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투쟁이 전진하려면 지난 투쟁을 잘 돌아보며 준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박근혜 정부를 정치적으로 타격한 중요한 정치 운동이었다.

지난해 8월 도심 시위에 5만 명이 모였다.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징계

위협 속에서도 박근혜 퇴진 선언에 나섰다. KBS 노동자들은 ‘보도 참사’를 반성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위한 파업에 돌입해 승리를 거뒀다.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은 진실 은폐에 혈안이 돼 있었다. 진실 규명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임이 밝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와 지배자들을 향한 분노가 모이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배자들을 한발 물러서게 하려면 매우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 새정치연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내협상’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참가가 절실했다.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가 소심한 태

도로 노동자 고유의 힘, 즉 생산을 멈출 파업이라는 힘을 발휘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박근혜의 냉담한 반응에 분노가 드높았던 6~8월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적어도 하루 파업이라도 호소했다더라면 투쟁의 양상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8월 금속노조 조합원 김영오 씨의 단식으로 조마조마함과 분노가 팽팽해졌을 때, 금속노조 지도부도 무언가 해 볼 만했을 것이다. 즉, ‘박근혜 퇴진’을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의 공식 요구로 채택하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박근혜 퇴진을 가능케 할 동력이 진정 가동되지 못한 것이 진정한 문제였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에 진지한 활동가들은 이 점을 돌아봐야 한다.

민주노총의 4월 24일 파업을 앞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박근혜 정부를 타격한 중요한 정치 운동이었다.

지금, 이 투쟁이 박근혜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균열을 내, 이후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투쟁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발행인: 김민석 편집인: 김민석 인쇄인: (주)이피디이승철
등록번호: 서울대08179 (각주건) 등록인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6499-2791
제본: 02-777-2791 E-Mail: ws@vnspace.org

박근혜의 사악한 이간질은 노동계급 전체를 향하고 있다

김하영

최근 박근혜는 공무원연금과 노동 부문 개악안을 시한 내에 합의하라고 압박하며 다시금 “미래 세대의 앞날”을 들먹였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을 노동부문 개악을 밀어붙이는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높이를 낮추라고 옥박질러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몰아넣는 게 박근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경총 부회장 김영배가 “연봉 6천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그 재원을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개선과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부아가 치밀게 만드는 이간질이다.

대기업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장시간 노동만 줄여도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개선과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통계를 보면, 1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522조 원의 0.8퍼센트만 사용해도 이 기업들에 고용된 비정규직 43만 명을 정규직화하고 연봉도 대폭 올릴 수 있다. 또,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여도 고용률을 76퍼센트로 올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간질을 통해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절대적 몫을 줄이고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내리려 한다.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노리는 것이다.

유(有)노조·대기업·정규직과 무노조·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 사이를 이간질하기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으면서, 그 부제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이라고 붙였다. 부제에서 드러나듯이, 정규직의 “과보호”를 풀어 노동시장 활력을 높임으로써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라며 마치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이 정규직 탓인 양 호도한다.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를 견고하게 독점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에서 상향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7년 금융 공황 이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치르게 하려고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도입한 것은 바로 정부와 기업주들이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됐고 워킹 푸어(노동빈곤층)가 늘었다.

게다가 서비스산업 비중 증대 같은 산업구조 변화, 독과점화에 따른 기업 규모와 지불 능력의 격차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1997년 위기 이후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훨씬 더 심화됐다. 2000년대 들어 삼성·LG·SK 계열사들의 순이익은 전체 사기업 순이익의 75퍼센트를 넘어섰을 정도다.



“미래 세대의 앞날”은 박근혜에 맞선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 투쟁에 있다.

**박근혜의 노동부문 개악의
칼날은 특정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자 계급 전체를
향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양산해 놓고 또다시 신자유주의 처방을 내놓으려다 보니, 이런 문제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유(有)노조·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을 좋은 일자리를 독점하고 청년·여성·비정규직의 기회를 빼앗는 악으로 묘사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좋은 일자리를 빼앗아 쪼개서 나누고 임금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7.4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보호’를 깨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단지 이들을 겨냥하는 게 결코 아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것이다.

가령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없애겠다고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을 손보려 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노조·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법이 포함하고 있는 보호장치를 잃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사용자와의 세력관계에서 더 취약한 이들에겐 노동조건 악화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골적인 비정규직 제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런 조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차 노동시장”(좋은 일자리)으로 들어갈 기회를 주기는커녕 비정규직에서 벗어나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박근혜의 공격은 모든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사용자들이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저 말로만 으름장을 놓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각에서는 잘 조직된 노동자들은 어차피 개별 노조의 단합을 통해 방어할 수 있으므로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 실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1차 ‘정상화’ 공격으로 지난해 이미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됐다. 지금도 정부는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공공부문에서부터 밀어붙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체계 개편이나 해고요건 완화 공격에서 결코 비켜나 있지 않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도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고, 저성과자 해고는 KT에서 보듯이 대기업들이 추진하려는 상시 구조조정에 이용될 것이다.

요컨대 현재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은 특정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을 향하고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동계급이 가져가는 몫을 줄이는 게 저들의 목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도 정규직에 유리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 결과는 미니잡과 파견 일자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22퍼센트)이 늘어난 것이었다. 하르츠 개혁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렸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압박했다.

한국 지배계급이 독일 모델을 특별히 주목한 것은 그것이 노동조건을 공격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딛고 수출경쟁을 재건한 케이스이기 때문일 것이다. 2000년 이후 중국 수출의 급속한 증가로 턱을 봐 온 한국 경제는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독일이 거둔 위기 전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립시키며 노동운동을 바라봐선 안 된다

지금까지 박근혜의 노동부문 개악의 칼날이 특정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자 계급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

가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노동운동 안에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 진정으로 겨냥하는 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미조직이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그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 꽤 있다.

이 주장은 이렇게 이어진다. 어차피 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위노조 투쟁으로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노동계급 내부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와 기업은 분노의 화살을 계속 정규직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정규직에 대한 공격은 단지 ‘이데올로기적 공격’일 뿐이라고 보는 셈이다. 그리고 정규직의 노동조건 방어 투쟁을 중시하거나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게 된다. 정규직 노동조건 방어는 결국 노동계급 내부 격차를 벌릴 것이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 회피용으로 이용될 뿐인 것으로 여겨질 테니 말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정규직·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진정한 노동조건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철밥통 논리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고립시켜 노동조건을 공격한 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한편, 정규직의 조건이 쟁점이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으로 더 나빠질 것도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기간 제한 연장이나 사내 하청 합법화의 길을 여는 문제점만 봐

▶ 4면으로 이어짐

▶ 3면에서 이어짐

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견 허용 제한이 정부안대로 완화되면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이 그 대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으로 타격을 받을 당사자이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투쟁의 주축으로 나서리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나 먼저 조직 노동자들이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면,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 운동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노동조합 조직화 방안이다.

요컨대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겨누고 있다. 다만, 이간질을 통해서로 반목시켜 각계격파하려는 것이므로, 노동운동은 이에 맞서 서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여겨, 한 부문이 공격당하는 것을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방관한다면, 심지어 한 부문의 '특혜'가 사라져야 자기 형편이 나아진다고 여긴다면, 각계격파당하기 십상이다.

노동계급 내부 격차 완화나

해소는 오직 계급투쟁을 통해서

한편, 박근혜 정부의 정규직-비정규직 이간질에 맞서 우리 쪽도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해소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소위 '프레임 전쟁'에서 밀린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해소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절대적 몫을 늘리는 것을 지향하면서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 줄이기를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보론'으로 귀결되기 쉽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자든지, 일자리를 쪼개자든지 하는 식으로 노동계급 내부에서의 나눔만 생각하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격차 증대를 감추려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 뿐이다.

1997년 이후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크게 떨어졌다.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강화, 사내유보금 사용을 통한 공적 연금 강화처럼 노동계급의 절대적 몫을 늘리는 것이 노동운동의 요구가 돼야 한다.

누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말하는 듯하지만, 이것을 진지하고 일관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신자유주의로 노동계급이 변해(내부 격차 증대) 하나의 계급으로서 단결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퍼져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노동계급 내 상이한 부문간 단결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진지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립서비스 집어치우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강동훈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지난 3월 4일 “디플레 우려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은 곧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급작스레 기준금리를 2퍼센트에서 1.75퍼센트로 인하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퍼센트대로 낮춘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내수 활성화 운운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금리 인하를 압박한 진정한 이유는 환율 인상(원화 가치 하락)으로 기업들의 수익을 높여 주려는 것이다.

금리를 내리면 전셋값이 올라가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 이미 1천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를 더욱 키울 위험이 크지만,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디플레 우려”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이 금리 인하로 기업들의 수익을 높여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임금 인상 운운한 것은 립서비스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당시 국무총리 정은찬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지만 재벌들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최경환도 지난해 7월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 임금 인상



최경환은 “임금 인상”을 말했지만, 노사정위에서는 임금 삭감 조치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등을 통해 기업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된 것은 없었다.

실제로 최경환은 최근에 “임금 인상이 정부 바람이지만 노사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발 물러났다. 또,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에게 시중노동임단가(시급 8천 원, 월급 1백 67만 원)를 적용하라고 지침은 내렸지만, 이를 여기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3월 말까지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합의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노사정위에서 다루고 있는 3대 핵심과제(통상 임금, 노동시간, 정년연장)는 죄다 임

금을 삭감시키는 조치들이다. 통상임금 범위 협소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리는 것이 바로 임금 삭감 효과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다. 게다가 경제위기 이후 실질임금 인상률은 0퍼센트대로 정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5천5백80원)으로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노동자 1명의 생계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밥 한 끼 값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한 시간 일해 봐야 겨우 빅맥 세

트 하나 사 먹을 수 있다. 연간 1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을 벌려면 최저임금으로 1년 내내(1천7백92시간) 일해야 하는 지경이다. 게다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백9만 명에 이른다.

반면, 재벌들의 공간은 차고 넘치고 있다. 2014년 말 국내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만 해도 무려 5백3조 9천억 원으로 1년 사이에 또다시 37조 6천 3백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었다.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날로 악화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기’는 매한가지인 새정치연합 안

장호중

대타협기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모두 다섯 가지다. 특히 마지막에 새정치연합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기’ 개악안을 내놓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가 구성되기 전부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에 반발하는 공무원노조 본부장들의 면담 요구도 끝내 외면했다.

물론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은 새누리당이나 정부의 개악안보다 삭감 액수가 조금 적다. 그럼에도 현행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명백히 개악이다.

첫째, 새누리당의 개악안은 34퍼센트 더 내고 43퍼센트 덜 받는 안이다. 새정치연합의 개악안은 29퍼센트 더 내고 11퍼센트 덜 받는 안이다. 새누리

당은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퇴직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해 실제 월수령액은 새누리당하고 차이가 크지 않다. 평균기준소득월액(월급)이 3백만 원인 노동자가 30년 동안 재직한 뒤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 안은 자녀 두 명 대학 4년치 등록금과 중형차 한 대 값을 날리는 수준이다(대략 8천6백만 원). 새정치연합은 여기서 차량 구입 비용(약 4천만 원)만 보전해 주는 수준이다. 30년 동안 추가로 내야 하는 기여금도 각각 3천2백 40만 원, 2천1백60만 원이다.

하향평준화

둘째, 새누리당은 신규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려 한다. 이는 신규 공무원들을 차별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조치이기도 하다.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안은 신규 공무원을 차별하지는 않는다. 그러

나 애당초 약속한 공적연금 강화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새정치연합 안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장치도 오히려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는 통합론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어차피 같은 방식이니 통합하라’ 하는 식으로 말이다.

막판에 제시된 김태일 안은 정부안을 조금 개선한 것이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부족한 연금을 민간퇴직연금에 가입해 해결하라는 것인데 노동자들은 결과적으로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게다가 민간 보험사는 공적연금보다 지급률이 낮다. 정부가 지급하는 매칭펀드는 민간 보험사들의 배만 볼릴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은 모든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려 한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넷째, 새누리당은 연금액의 자연인상분을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하려 한

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 가치가 떨어지도록 해 둔 것이다. 또 ‘국가 지급 보장’조항을 몰래 삭제해 버렸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서도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만 박근혜는 재산이 3억 3천만 원이나 늘었다. 장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평균 2억 2천만 원씩 늘었다. 국회의원 중 82퍼센트가 재산이 늘었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수백조 원에 이르지만 박근혜는 한사코 법인세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 생계 수단인 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날뛰는 것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완전히 저지해 이를 공적연금의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말로 공적연금 강화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근혜 공격이 관철되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첫째, 해고 요건 완화다.

현행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시에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로 개인별 인사사고에 따라 언제든지 상시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둘째, 임금 삭감이다.

• 통상임금 억제 → 법에 명시할 통상임금 적용 항목의 범위를 줄여 통상임금을 줄이려 한다.

• 직무성과급제 도입 → 사무직 일부와 제조업 과장급 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성과급제를 대폭 확대하려 한다. 현대·기아차 과장급 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는 성과급제는 A~D 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저성과자'는 연말에 노란 봉투(해고 통지서)를 받을까 두려움에 떠다.

• 이중임금제 → 이미 자동차 기업들은 신입사원들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임금체계 개악은 이런 이중임금제를 확대할 것이다.

• 임금피크제 → 생산성이 떨어지는 50대 중반경부터 아예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삼성과 LG, KT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자녀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때부터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가자, 4·24 총파업! 멈춰, 박근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넣을 박근혜의 반(反)노동자 정책에 함께 맞서야 한다.

• 연장근로 수당 삭감 → 정부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60시간으로 늘리려 한다(현행 52시간). 이도 모자라 휴일특근 수당을 1백50퍼센트에서 1백25퍼센트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상임금이 늘어도 그 효과

가 줄어들다.

셋째, 공무원연금 개악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악하려 한다. 이것이 성공하면, 다음 차례는 국민연금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공적연금을 꺾메기로 만들고, 사적연금(각종 보험사에서 만든 상품)으로 대체하려 한다. 자본가들에게 우리의 노후를 맡기라는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 확대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도 확대하려 한다.

제조업에서는 파견근로가 불법인데, 사내하도급법을 제정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무용지물로 만들려 한다.

다섯째, 노조 약화다.

정부의 공격이 관철되면,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저성과자'로 분류되지 않으려고, 편한 부서에 배치받으려고 관리자에게 잘 보여야 한다. 조합원들은 노조로 단결하기보다 관리자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자 투쟁의 무기인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선 노조와 맺은 단협까지 해지하며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철도, 의료,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도 추진하려 한다.

이런 개악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다. 이대로 당할 것인가,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함께할 것인가?

노동자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한판 승부를 피해선 안 된다. 가자, 4·24 총파업! 멈춰, 박근혜!

김우용 기자 노동자, 금속노조 대의원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들러리 – 노사정위 중단하라

정부가 임금 삭감,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노사정위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박근혜를 비롯해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이어 '3월 31일 약속시킨 내 합의'를 주문하고, 노사정위원장 김대환이 '합의 불발 시 사퇴'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 속에서 한때 4월로 연장될 수 있다고 점쳐지던 노사정위 논의도 속도가 빨라졌다.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 등은 합의문 초안 제출을 목표로 연일 회의를 하고 있다.

물론, 논의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비정규직 확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요건 개악 등 여러 쟁점에서 정부·재계와 한국노총 사이에 견해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한국노총 집행부가 노사정위에 계속 남아 타협을 조율하고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유감스럽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3월 26일 노사정위 회의에서 법정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하되,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 근로 수당을 안 주고도 노동시간을 자유자재로 늘였다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하자며 문을 열어 줬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임금피크제의 대안으로 '노동시간 피크제'를 언급하



노사정위 앞에서 규탄 농성 중인 민주노총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들러리 기구다.

기도 했다. 일정 연령이 되면 노동시간을 줄여 인건비 총액을 줄이되, 단위시간당 임금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령자 임금 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그동안 노사정위가 집중 논의해 온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 3대 현안은 이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조처들이다. 만약 이런 중요한 쟁점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박근혜는 그것을 손에 쥐고 곧장 법 개악과 정부 지침·가이드라인 발표 등에 착수할 것이다.

실사 노사정이 3월 말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정부는 그동안의 "사회적 대화", "합의 노력"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내세우며, 개악의 명분으로 삼고자 할 것이다.

들러리 기구

노사정위는 대화 시늉을 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들러리 기구다. 일각의 주장처럼 논의 시한을 약간 더 늦춘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민주노총 집행부는 올바르게

도 한국노총 집행부에 노사정위를 탈퇴해 함께 싸우자고 촉구한 바 있다.

이미 그 필요는 차고 넘친다. 대표적으로 2월 말과 3월 초 노사정위에 제출된 공익위원안은 정부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베껴 써, 그 위험성을 잘 보여 줬다. 정부는 마치 이것이 중립적 '공공의 안'인 것처럼 포장하려 한다.

노사정위 산하 공공부문발전특위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에 묶어 두려고, 최근 공공부문발전특위 논의를 4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하는 시늉을 하

면서 뒤에서는 공격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3월 25일에는 공공기관장들을 불러 놓고 2단계 '정상화'의 핵심 내용인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공공부문발전특위 참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발전특위에는 불참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한국노총의 참가를 사실상 인정하며 양대노총 공대위를 통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동으로 정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속도 내는 박근혜

그러나 정부의 집중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 보다는 한국노총의 공공부문발전특위 참가를 분명히 비판하며 일관되고 단호하게 투쟁 건설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 박근혜의 공격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중단 등을 촉구하며 3월 26일부터 노사정위 앞 농성을 시작하고, 집중 집회 등을 조직하며 "총파업 비상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이미 '전제 파업'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정권이 도발한다면 시기를 앞당겨 파업에 나서겠다"고도 말한 바 있다. 신속한 정세 대응력이 중요한 시기다.

박설

새로운 여성주의의 등장과 마르크스주의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37)가 2015년 2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의 모임에서 한 강의를 녹취한 것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자가 덧붙인 것이다.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과 여성주의가 전 세계에서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흥은 반자본주의 운동이 떠오르면서 시작됐는데, 특히 최근 몇 년 새 더 강력해진 듯합니다. 인도에서 여성들이 강간당한 것에 사람들이 크게 분노해 대규모 운동을 벌인 것이 한 사례입니다. 성추행에 반대해 북미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 나간 ‘हे폰 여자 옷차림으로 걷기’(SlutWalk) 운동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배계급 인사들이 저지르는 성추행과 성폭행이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게다가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는 ‘야한 문화’(raunch culture)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야한 문화’는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가 다시 정상 취급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폴댄스(봉춤)를 추는 동아리가 보통의 동아리인 것처럼 여겨지며 대학교에 생겨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저항하는 운동을 반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의 불리한 점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 운동은 노동계급 투쟁 수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 운동은 대학 캠퍼스에 집중돼 있으면서 주류 정치 담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성주의에 반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혐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항상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투쟁하면서도 그들의 사상과 경합을 벌입니다. 이 점에서 린지 저먼과 크리스 하먼 등이 발전시킨 가부장제 이론 비판은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여성주의의 부흥 반자본주의 운동의 성장과 함께 여성주의도 크게 성장했다. 201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헤폰 여자 옷차림으로 걷기’(SlutWalk) 운동.

는 여성 차별이 계급 사회와 밀접히 관련돼 있고, 여성 차별을 근절시키려면 노동계급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여성 차별의 징후들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고 항상 주장했습니다. 일부 여성주의자들이 우리를 적대한다고 해서 우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여성 차



별의 징후에 대항하는 것으로부터 위축되면 안 됩니다.

현재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여성주의는 1960~70년대에 유행한 제2물결 여성주의와 몇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제2물결 여성주의는 운동이 가라앉으면서 두세 진영으로 분열했습니다. 첫째, 철저한 여성주의입니다. 철저한 여성주의는 남성 개인의 가부장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며 분리주의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둘째,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입니다. 이 진영은 분리주의는 거부했지만 영국에서는 노동당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입니다. 영국의 사회주의적 여성주의는 운동이 가라앉으면서 점점 수세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새로운 여성주의도 이렇게 분열하고 말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포르노나 성노동 같은 오래된 쟁점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때 제2물결 여성주의 때와 상당히 비슷한 구도로 입장이 갈립니다.

다원주의적

새로운 여성주의의 둘째 특징은 스스로 포괄적이고 다원주의적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종차별, 섹슈얼리티, 장애 같은 쟁점에 개방적이고 민감합니다.

새로운 여성주의의 셋째 특징은 급진적 버전의 포스트구조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계에서 새로운 여성주의는 퀴어 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했습니다. 미셸 푸코가 최초로 발전시킨 퀴어 이론은 ‘섹슈얼리티는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핵심으로 합니다.

질의 응답

Q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여성주의가 부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 여성주의의 다른 조류들과 구분되는 특징, 발전 전망 등이 궁금합니다. 또, 새로운 여성주의가 학계의 퀴어 이론 같은 것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여성주의의 성장은 1990년대 이래 계속된 사회비평(social critique) 재활성화의 일부라고 봅니다. 포스트페미니즘에 대한 반발로서 성장한 면도 중요합니다. 포스트페미니즘은 이제 여성 평등을 대체로 달성했다고 봅니다. 새로운 여성주의의 성장은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특히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성적 회로· 폭

력과 차별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새로운 여성주의를 단일하고 일관된 운동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1960~70년대에는 여성주의의 다양한 조류들을 하나로 모아 내는 여성 운동 대회 같은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여성주의는 그 안에 정치적으로 다종다양한 경향들이 있고, 어떤 경향이 우세한지 알기 힘듭니다. 또, 그 다양한 경향들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공통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1960~70년대의 옛 여성주의(old feminism)에는 모두들 반대합니다. 초점을 너무 서구 백인 여

성들에게 맞췄다면서 말입니다.

새로운 여성주의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그보다 더 넓은 투쟁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여성주의는 급진화가 일어나고 투쟁이 귀환하는 때[1990년대 말] 탄생한 것이므로 사회적 투쟁이 전반적으로 더 발전하면 새로운 여성주의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투쟁의 발전이 노동자 투쟁의 전반적 고양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새로운 여성주의를 둘러싼 논쟁에 개입하기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여성주의와 퀴어 이론의 관계는 꽤 복잡합니다. 새로운 여성주의 안

에서 논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섹슈얼리티가 단지 생물학적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도 본다는 점입니다.

물론 마르크스주의 전통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와 비슷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성역할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재생산할 필요에서 비롯했고, 여기서는 생물학적 속성이 어느 정도는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여성주의는 주관적 ‘권력 관계’에 대한 퀴어 이론의 강조도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여성주의는 권력 관계를 더 넓은 사회관계 속에 자리매김하려는 것에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퀴

어 ‘상호교차성’ 개념도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이론이 강조하는 바는 각각의 피차별 사회 집단은 서로 다른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과 다른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이론은 상당히 허약합니다. 경험 차원에만 머물면서 차별의 양상을 묘사할 뿐 깊이 파고들어 차별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이론을 이해하고 그중 몇몇 쟁점에서는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주의의 부흥과 관련해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의 재등장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리즈 보겔의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차별>이 재출판된 것입니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된 30년 전보다 이번에 훨씬 더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나온 개정판에는 데이비드 맥널리와 수 퍼거슨이 북미 지역 사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쓴 흥미로운 서문이 실려 있습니다. 맥널리와 퍼거슨은 리즈 보겔의 연구 결과를 새로운 여성주의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상호교차성 개념을 더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겔의 저서를 읽어 보면, 보겔의 이론은 오히려 비슷한 때 크리스 하먼이 발전시키고 있던 이론[노동자 연대가 펴낸 소책자 <여성 해방과 맑스주의>에서 설명되고 있다고 훨씬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이 논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주므로 중요합니다.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은 리즈 보겔의 책에 대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비판도 가미하고 있지만) 긴 서평을 실었습니다.

결론짓겠습니다. 새로운 여성주의의 부상에 대응하는 과제의 첫 단계는 그들과 연관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투쟁에서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과 토론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운동 안에는 여성 차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꽤 있을 것입니다.

어 이론에 대해서는 콜린 윌슨이 <인터내셔널 소셜리즘>[132호(2011년 가을)]에 쓴 훌륭한 논문(제목: ‘Queer theory and politics’)이 있습니다.

Q 분리주의적 여성주의는 여성 차별의 원인을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서 찾고, 퀴어 이론과 접목된 새로운 여성주의는 성과 여성 차별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이 정치적으로 함의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에서 콜린 윌슨과 존 몰리뉴가 논쟁을 벌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콜린 윌슨과 존 몰리뉴의 논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존 몰리

경남 무상급식 중단 논란

밥 먹는 데 가난을 증명하라는 홍준표

김문성

최근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강성 우익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 위기 조짐이 다시 커지는 데다, 4·29 재·보선에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당 대표 김무성은 한양대 학생 특강에서 “5·16은 혁명”이라며 찬양했고, 원내대표 유승민과 함께 사드 배치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당 대표 출신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도내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홍준표는 지난해 10월 무상급식 예산 논란을 일으키며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해 버렸다. 그 뒤 지역 내 반발로 올해 도 예산에는 다시 1천1백 25억 원이 일단 무상급식 예산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3월 19일 새누리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홍준표와 공조해 ‘경남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이미 편성된 무상급식 예산을 빼돌려서 진행하는 것이다. 빈곤 가정을 발미 삼아 무상급식 예산을 없애 버린 것이다. 전형적인 이간질 술책이다. 이른바 서민 가정의 자녀들이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경쟁적으로 더 가난해 보일 서류를 수십 개 내야 한다.

무엇보다 홍준표의 도발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고 따라서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배자들의 고통전가 담론과 맞아떨어진다.

또한 복지국가를 향한 아래로부터의 열망과 압력에 의해 시작된 무상급식을 무력화하는 한편, 진보 교육감들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파를 결집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을 것이다.

홍준표는 도지사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래 놓고는 말을 간단히 뒤집었다. 다음 대선에서 우파들의 지지를 얻어 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홍준표는 부자에게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좌파이므로 부자집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공짜’ 밥을 주는 무상급식 정책을 좌파가 옹호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비웃었다.

이는 2010년 무상급식이 처음 전국으로 퍼져 나갈 때, 우파들이 반대했던 바로 그 논리다. 당시 우파들은 이견회의 손자까지 세금으로 밥을 먹일 필요가 있냐고 주장했다. 그 돈을 아껴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가정에 더 많이 복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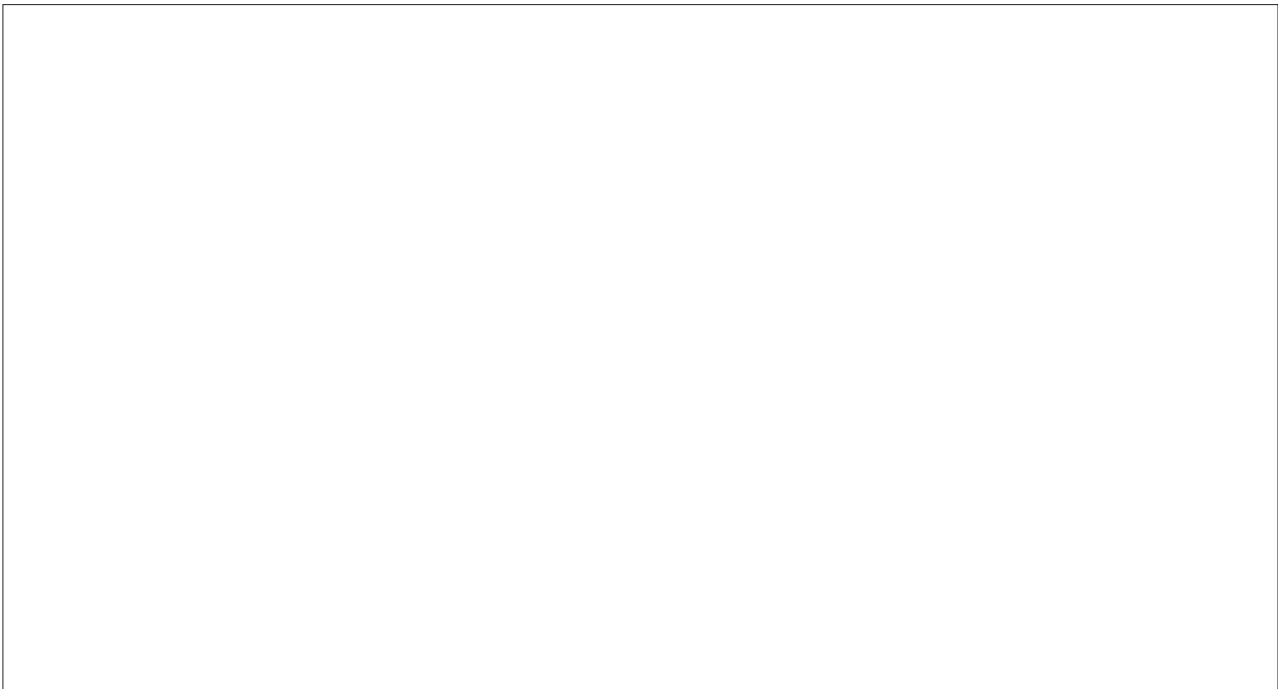
바로 이런 논리를 앞세워 2011년 서울시장 오세훈은 무상급식 중단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비록 그 결과는 오세훈 본인이 서울시장을 중도 사퇴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선별 복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의존

성, 즉 굴종이다. 또, 선별 복지는 수혜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들끼리 ‘누가 더 가난하냐’를 갖고 경쟁하게 만든다.

보편 복지가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측면 하나는 복지 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은 정당하게 복지 축소에 반대하고 복지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신감을 갖기에 더 유리해진다.

홍준표 등의 궤변과 달리 보편 복지와 소득 재분배는 대립하지 않는다. 삼성 이견회와 이재용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된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 복지를 늘리면 보편 복지와 소득재분배는 얼마든지 결합할 수 있다. 진보정치세력이 부자 증세를 통한 보편 복지 실현을 요구해야 하는 까닭이다.



무상급식은 당연한 권리다 “가난하다고 놀리는 아이들 때문에 할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는데, 무상급식아! 고마워.”

무상급식 중단은 간접적인 임금 삭감이다

노동계급은 보편 복지 확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 복지 자체가 노동계급에게는 간접적인 임금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에게 자녀들의 교육비는 임금 소득에서 지출된다. 따라서 무상급식 실시는 간접적인 임금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보편적 복지는 간접 임금, 즉 사회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무상급식 중단은 임금 소득

을 하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즉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고 교육이 중요한 노동력 재생산 과정이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은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 건강한 신체(노동력)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의 일부이므로 체제가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앞서 지적했듯이 보편적 급식은 이런 복지를 차별 없는 권리로

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형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 위기 시대에 사장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 마당에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반(反)노동 정책인 것이다.

노동운동이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겨야 하는 이유다.

어떻게 싸울까

경남 하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려고 3월 27일 전교생이 등교를 거부하기로 했다. 경남 곳곳에서 홍준표에게 항의하는 집회와 1인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 좋은 일이다.

이런 저항들이 실제로 홍준표의 반동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려면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2011년 오세훈의 무상급식 반대를 막아 낸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2011년은 아랍 혁명과 미국과 유럽 등에서 번진 광장 점거 운동 등으로 국제적

으로 노동계급에게 세력균형이 유리한 때였다. 한국에서도 반값등록금 운동에 대학생 수만 명이 참가했다. 이런 배경에서 서울의 노동운동, 사회운동, 진보정당들이 단결해 반대 투표를 조직했다.

물론 그때보다 경제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돼 지배자들의 반동도 더욱 거칠고 필사적일 것이다. 홍준표의 반동이 성공하면, 이미 예산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도 무상급식 후퇴가 확산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지 지역 의제로서가 아니라 전국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따라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국가(중앙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맞서는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이 성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계획한 일련의 파업들이 성공하는 것과 보편 복지의 확대와 방어를 결합시키는 것이 좌파들의 과제다.

뉴의 주장에 더 동의합니다. 존 몰리뉴의 글은 원래는 조너선 닐과 낸시 린디스판이 쓴 글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너선 닐과 낸시 린디스판의 글은 여성 차별을 관념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젠더뿐 아니라 생물학적 성도 연속성이 있는 스펙트럼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현대 과학을 통해 생물학적 성에도 여성과 남성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젠더가 구성되는 물질적 기초는 분명 있습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이뤄지는 재생산(번식)이 있습니다. 그래

서 가족이 계급 사회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 차별의 물질적 기초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 기초 위에서 어떻게 성역할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트랜스젠더 문제 등에도 섬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인터내셔널 소셜리즘》도 트랜스젠더 문제를 다루는 논문을 실었습니다. 트랜스젠더들도 가족이 조직되는 보통의 형태를 위협하는 존재여서 차별받는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존 몰리뉴가 콜린 월슨을 비판한 핵심 이유는 월슨이 조너선 닐과 낸시 린디스판의 주장을 반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Q 영국의 여성주의자들 사이에 성에 대해 더 개방적인 쪽과 더 보수적이고 여성을 피해자로만 보는 쪽이 서로 대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립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성의 자유로운 표현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섹스에 긍정적인 여성주의’(sex positive feminism)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은 여성들이 섹슈얼리티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열렬히 주장합니다.

성의 표현과 관련해 영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쟁점은 포르노와 성노동 문제입니다. 최근 포르

노를 긍정하는 여성주의자들과 포르노를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들이 둘 다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포르노를 반대하는 게일 다인스(Gail Dines)라는 여성주의자는 런던에서 여러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 개입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한 편을 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성의 표현을 찬성한다’며 포르노를 긍정하는 쪽을 편 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도덕주의적 대응의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포르노에 대한 가장 강경한 반대론자인 게일 다인스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 정부들에서 성매매 관

련 정책 자문으로 일하면서 성 구매 행위를 범죄화하는 입법을 옹호합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이런 정책이 오히려 성매매 여성을 더욱 위험한 처지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이 논쟁에서는 양쪽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논쟁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매우 분명해야 하는 동시에, 매우 섬세한 전술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주장을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제기할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통역 천경록 / 녹취 박충범

공동전선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지난호에서 우리는 초좌파주의를 살펴 봤다. 초좌파주의가 해악인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개혁주의적 지도자들을 여전히 신뢰하는 대다수 노동자들과의 공동활동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하의 글은 **김종환** 기자가 몇몇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개작한 것이다. 그 글들의 출처는 글의 끝에 명시했다.

왜 공동전선이 필요한가

사회주의자들이 최대강령[사회주의 사회 성취와 관련된 일련의 요구들]만을 주장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최대강령만을 내세우는 태도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기에 개혁주의적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상을 전파하는 언론, 교육 등의 이데올로기 수단을 모두 지배계급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말처럼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사람들이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누군가가 부분적으로라도 지배적 사상을 거부하고 좌파 정당을 지지하거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곧바로 혁명적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지라도 말이다. 혁명가들은 그런 사람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체제의 이러저러한 부분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깨닫는다. 예컨대, 제1차세계대전 종전 무렵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지를 목도했고 그런 상황에서 혁명적 단체들은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각국 노동계급은 제1차세계대전 동안 대량 학살을 겪은 뒤 대규모 혁명적 투쟁에 나섰다. 공동전선 이론은 바로 이 시기 사회주의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겨났다. 당시에는 대중적 혁명 단체들이 대중적 개혁주의 단체들과 함께 활동했다.

공동전선의 목적은 특정한 방어적 요구(노동조합 이슈들이나 여성의 권리 옹호, 제국주의 전쟁 반대, 정치적 민주주의 옹호, 환경 파괴 저지 등)를 위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혁명적 정치와 혁명적 조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레온 트로츠키

공동전선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레온 트로츠키다. 제1차세계대전 직후 국제 혁명적 좌파의 경험과 레닌의 '좌파 공산주의' 비판을 바탕으로 공동전선 이론을 고안한 것이 트로츠키였다. 그는 1922년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의 시급한 과제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 맞서 싸울 때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 과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은 선전주의 단체일 뿐, 대중 행동을 도모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 [트로츠키 글의 전문은 '트로츠키의 공동

전선 테제'(*《마르크스21》* 8호)에서 볼 수 있고, 이하의 그의 말 인용도 이 글로부터 따온 것이다.]

개혁주의자들보다 혁명가들의 세력이 작은 상황[대중 정당일지라도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소수파인 경우를 포함]에서는 특정 요구를 놓고 개혁주의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혁명가들은 특정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 운동을 건설하려 하는데, 첫째 그것이 개혁을 성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고, 둘째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혁명적 정치 쪽으로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매우 중요한 일부가 개혁주의 조직에 속해 있거나 개혁주의 조직을 지지한다. 그런 노동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개혁주의 조직을 떠나 우리[공산당]에게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이 대중 활동에 실제로 참가한 후에야 이런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행동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야 한다. 그것은 투쟁의 애초 구호가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더 많은 대중이 운동에 동참할수록 대중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대중의 자신감이 높을수록 운동은 더 단호하게 전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운동의 규모가 커지면 운동이 급진화하는 경향이 있고, 공산당의 구호, 투쟁 방법, 공산당의 지도력 일반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다.”

그러나 이런 급진화 과정은 전혀 자동적이지 않으므로 혁명가들은 독립적으로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공동전선에 참여하지만 단 한 순간도 공동전선 속에 녹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동전선 안에서 나머지와 구분되는 세력으로서 활동한다. 우리가 다른 자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싸운다는 것, 우리가 다른 자들보다 더 명확히 사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더 대답하고 단호하다는 것을 바로 투쟁 안에서 광범한 대중이 몸소 느끼도록 해야 한다.”

공동전선 전술 정식화의 역사적 기원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때, 사회주의 혁명은 유럽 전역에서 현실적 전망이 됐다. 제1차세계대전의 동부 전선이 무너지면서, 러시아 혁명으로 고무 받은 혁명적 운동이 전 유럽에서 우후죽순 솟아났다. 여러 나라에서 공산당이 창당되고 엄청나게 성장했다.

노동자 평의회를 건설하고 기존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는 것이 당시에는 현실적인 목표였다. 볼셰비키의 성



혁명적 단체가 개혁주의적 단체와 함께 대중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려면 공동전선 전술을 잘 이해해야 한다. 2014년 9월 27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공도 그것을 핵심으로 했다. 국제주의적이었던 볼셰비키는 코민테른(제3인터내셔널)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갓 태어난 러시아 소비에트 국가를 방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확산돼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은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1918~23년 독일에 패배했고, 혁명 러시아는 고립됐다. 여러 면에서 봤을 때 1921년쯤 혁명의

파고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런 세력균형 변화에 맞게 코민테른은 국제 혁명을 위한 전략을 조정해야 했다.

1921년 코민테른 3차대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 정당과 노동조합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배신한 바 있었다. 독일은 특히 두드러진 경우였는데, 세계 최초의 노동자 정당인 사회민주당 지도부의 명령으로 위대한 마르크

스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립크네히트가 살해당한 것이다.

코민테른이 채택한 공동전선 전술은 각국에서 공산당을 창당하거나 기존 공산당을 더 크게 성장시켜야 하고 무엇보다 공산당이 “대중에게 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코민테른은 러시아 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명히 “공동전선 전술을 채택해야 한다”고, 즉 공산당은 정치적 성향이 다른 노동자들과도



독일 사회민주당을 “사회 파시스트”라 규정하며 공동전선을 거부한 공산당의 전술은 히틀러의 집권이라는 비극을 낳았다.

공동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하다면 심지어 파업을 파괴했던 개혁주의 지도자들, 룩셈부르크와 립크네히트를 살해한 자들과도 함께해야 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이다.

왜 그런 것일까? 코민테른 4차대회(1922년)가 채택한 테제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요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동전선 전술은 공산당이 다른 정당과 단체에 속했거나 아무런 소속이 없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계급이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부르주아지가 빼앗지 못하도록 함께 맞서 싸우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과 힘을 키우고, 또 사람들이 개혁주의 사상과 단절하기를 바란 것이다. 물론 그러려면 독자적 조직을 유지해야 했다. 트로츠키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공동전선 슬로건은 그래서 나온 것이었다: “따로 행진하지만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간다!”

독일의 참담한 교훈

트로츠키가 1933년 히틀러 집권 전까지 독일에 관해 쓴 글들은 공동전선을 탐구할 때 특히 유용하다. 물론 공동전선 전술은 그 전에도 제안된 적이 있었다. 공동전선 전술은 러시아 혁명 과정

내내,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성장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했었다. 그러나 공동전선 개념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 주는 것은 바로 트로츠키가 히틀러의 집권을 막기 위해 쓴 글들이다.

그 시기에 트로츠키는 공동전선의 모든 측면을 다뤘다. 또, 자신이 공동전선에 관한 주장을 “끝도 없이 되풀이해야 한다”고 불평했다. 코민테른(스탈린과 그 추종자들이 장악한)과 독일 공산당이 나치에 맞선 투쟁에서 다른 노동자 정당과 노동조합에 취한 좌파적 종파주의 정책 때문이었다.

간단히 말해, 독일 공산당은 사민당을 비롯한 다른 세력과 협력해서 히틀

러와 나치에 맞서기를 거부했다. 심지어 사민당을 “사회 파시스트”라는 이름을 지어 붙였는데 그 뜻은 사민당이 히틀러와 본질이 같고, 정책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31년 이렇게 선언했다. “사민당을 먼저 물리치지 않고서 파시즘을 물리치기란 불가능하다”. 그에 따라 공산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나치와 충돌하는 것도 가로막았다.

이런 분열 때문에 노동계급은 마비됐고 운동은 단결하지 못했다. 그 덕분에 나치는 1933년, 히틀러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 한 장 깨지 않고” 집권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노동계급이 이렇게 패배하자 사회주의 운동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이 사건으로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을 더는 개혁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독일 공산당과 코민테른이 정치적 자살 행위와 다른 없는 이런 초좌파적 정책을 취한 것은 그들이 완전히 오판했기 때문이다. 독일 공산당은 자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고(물론 수십만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히틀러의 나치당은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자신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고 봤다. 심지어 히틀러가 집권한 뒤에도 한참 동안 이런 황당하게 비현실적인 정세 판단을 하고 있었다.

트로츠키는 히틀러에 맞선 투쟁에서 공동전선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거듭거듭 주장했다. 심지어 히틀러가 갖 권력을 차지하고나서 몇 주가 지난 1933년 2월까지도 트로츠키는 독일 공산당에게 공동전선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즉, 공산당과 산하단체들이, 여전히 수백만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민당 및 그 계열의 노동조합과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각 세력은 독자적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단결해 파시즘에 맞서 싸우고 격퇴시켜야 했다.

소련과 독일 공산당의 스탈린주의 지도부는 트로츠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민당 지도부가 부르주아지의 정치인들이고, 히틀러와 똑같은 경제 체제를 지향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계급 내 의식이 불균등하다는 것(특히 사민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의 의식)을 무시하고 공산당의 이익만을 좇은 행태로, 1917년 볼셰비키가 했던 것과 정반대의 행동이었다.

독일 공산당은 적색 전선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지만 사민당과, 사민당 지도부에 대한 공산당의 초좌파적 태도를 지지하지 않는 단체·개인들은 배제했다. 이후 독일의 역사를 보면 그런 종파주의와 분열주의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았는지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독일의 비극은, 마르크스주의적 방법이 제대로 적용되면 러시아 혁명에서처럼

성공을 낼 수 있지만 그 방법이 무시되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입증한 것이기도 했다. “사민당 노동자들은 사민당 지도부 편에 그대로 남고, 공산당 노동자들은 자신과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트로츠키)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자들과 격렬히 논쟁하면서 볼셰비키가 어떻게 소비에트 안에서 활동했는지 1917년의 경험과 사례를 들었다. 특히, 트로츠키는 당시와 비슷한 상황인 1917년 8월 말 꼬르닐로프 반란에 직면했을 때 볼셰비키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꼬르닐로프 쿠데타

꼬르닐로프는 2월 혁명으로 차르가 내쫓기고 대신 들어선 임시 정부를 전복하고자 쿠데타를 일으킨 우익 러시아 장군이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이끌고 있었고, 대표적 인물은 사회혁명당 대표 케렌스키였다.

볼셰비키는 당시 임시정부에 의해 혹독하게 탄압받고 있었다. 트로츠키를 포함해 볼셰비키 지도부의 많은 사람들은 수감됐고, 레닌 등은 숨어 지내야 했고, 볼셰비키의 간행물도 발행 금지됐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꼬르닐로프 쿠데타를 좌절시키기 위해 다른 정당들에 공동전선을 제안했다. 트로츠키는 후에,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멘셰비키·사회혁명당 지도부(7월에 트로츠키를 구속해 수감시켰던 자들!)와 함께 꼬르닐로프에 맞서 공동전선 회의를 진행했던 일의 진상을 종종 언급했다.

노동계급이 성공적으로 대응에 나서자 꼬르닐로프는 페트로그라드 장악에 실패했고 결국 쿠데타 기도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볼셰비키는 주도적 구실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노동자, 병사, 농민들에게서 큰 존경을 얻게 됐다. 이 반란과 그에 대한 볼셰비키의 전술은 10월에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 사례는 현실에서 공동전선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 준다. (또한 독일에서처럼 공동전선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 운동이 얼마나 비효과적이고 심지어 소모적일 수 있는지 보여 준다.)

꼬르닐로프와 케렌스키가 둘 다 같은 체제를 지향했다는 점을 (독일 사민당·히틀러와의 공통점이라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겠다. 트로츠키는 케렌스키를 “4분의 3 정도는 꼬르닐로프와 공범”이라고 불렀다. 그런데도 케렌스키와의 공동 투쟁에 나서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 꼬르닐로프를 물리쳐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앞두고 볼셰비키 지도부가 올바른 전술을 내놓자 두 달 뒤 케렌스키 정부는 무너졌던 것이다.

▶ 12면으로 이어짐

공동전선 운영의 원리

▶ 11면에서 이어짐

“공동전선은 방어적 전술이지만, 즉각적인 요구를 놓고 벌이는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공세로 나아가고자 하는 전망 속에서 취하는 전술이다. ... 따라서 공동전선은 결코 선전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 오직 구체적인 목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구호가 추상적일수록 (예컨대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한 좌파 정부 수립 같은) 중간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이 [지배자들과의] 대결을 회피할 구실을 찾기가 더 쉬워진다. 반면에 요구가 제한적이고 구체적이면(예컨대, 노동조합은 정부가 학교 급식에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에 반대하라) 그런 자들이 [투쟁을] 회피하면서 좌파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1972년 영국 국제사회주의자단체 대의원협의회 결정문 중 '단결에 관해')

경제 위기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 박근혜 정부와 사용자들의 집요한 공세, 새정치연합의 더한층 친자본주의화, 정의당의 우경화, 진보당 강제 해산,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더한층 소심해짐, 이에 대한 반발로 일부 급진좌파들의 인내심 부족과 초좌파적 경향성 등. 바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파의 공세를 물리치기 위해 좌파가 단결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결할 수 있을까? 어떤 정치적 원리 위에서,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여러 세력들이 — 새정연을 지지하는 셀프 개량주의,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급진좌파들 등 — 모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돼 유기적 단결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통합을 기대하기엔 그들 사이에 목적과 수단, 목표와 전술, 계획과 전통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그 뿌리가 너무 깊다.

그러나 공격에 맞서 싸우려는 노동자들이 이들의 단결을 갈망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그런 바람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런 바람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좌파는 일정 수준의 단결을 도모해 노동계급이 재앙 수준의 패배를 겪지 않도록



공동전선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러시아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전선 전술이다.

공동전선의 기초는, 여타의 쟁점에서는 막대한 정치적 이견이 있는 좌파들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요구(예컨대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반대,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노동기본권 등)를 중심으로 노동자와 노동자 단체들을 단결시키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이 전에 누렸지만 지금 도로 빼앗길 우려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혁명가들과 개혁주의자들이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전술이 그렇듯, 공동전선 전술은 아주 까다로운 뿐 아니라 자칫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전선을 이루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공동전선은 ~가 아니다

“코민테른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소비에트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늘 요구해 왔다. 코민테른이 앞에서 한 말 [공산주의자는 사민주의자·아나키스트·신디컬리스트 등과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과 공산

주의자들이 독자적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 사이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단 한 구절도 없다. 독자적 정당을 만드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 나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코민테른은 온갖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공동의 목표라고 당신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 당신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걸고 싸우기 위해 소속 단체의 차이를 뛰어넘어라!

“어느 노동자도 자신의 임금이 더 깎이기를 원치 않는다. 공산주의자·사회민주주의자·신디컬리스트뿐 아니라 기독교 노동조합, 자유주의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는 아무도 없다. 따라서 모두 사용자들의 공세에 맞서 하나의 전선을 이뤄 싸워야 한다. ... 모든 노동자는 폐기처분되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실업을 늘리는 것 일체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공동전선을 위하여!’, 1922년 1월 코민테른 집행부 성명)

공동전선은 혁명 정당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동전선 전술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혁명적 정치와 단체가 개혁주의

정치와 단체에 종속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공동전선은 혁명가들이 독자적 세력으로 존재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혁명가들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공동전선의 가능성도 더 커진다.

공동전선은 “서로의 차이일랑 깨끗이 잊고 무조건 대동단결하자”는 식의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모든 공동전선 전술에서는 개혁주의자·중간주의자들의 등을 떠미는 정치적 투쟁이 벌어지고 또 피할 수 없다 — 개혁주의자·중간주의자들이 떠벌린 만큼 행동에 나서도록, 그들이 자본가들과 맺고 있는 연계(직접적이든, 노동조합 관료를 통해 간접적이든)를 부분적으로 끊도록, 그리고 그들이 지지한다고 공언한 그런 목표를 위해 혁명가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도록 말이다.

또한 공동전선은 혁명적 단체들의 연합체가 아니다. 공동전선의 취지 자체가, 즉각적인 요구는 지지하지만 혁명적 정치는 (적어도 지금은) 온전히 수용하지 않는 노동자와 노동자 단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런 세력을 끌어들이지 않는 그런 ‘공동전선’은 완전한 엉터리다.

공동전선은 꿈수도 아니다. 위에서 공동전선은 제한된 요구(예컨대, 노동

시장 유연화 반대)를 내건다고 했는데, 혁명가들은 **진심으로** 그 요구를 쟁취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공동전선은 단순히 선전을 위한 기구(일종의 잡담 장소)도 아니다. 공동전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분적이고 즉각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공동의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런 공동 행동이 노동계급의 자신감과 전투성을 북돋기 때문이다.

지금 공동전선이 필요한가?

혁명적 단체가 공동전선 전술을 구사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때때로 다른 단체들과 타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 투쟁이 벌어지는지, 해당 투쟁에서 개혁주의·중간주의의 영향력과 그 단체들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동전선 전술은 실천을 통해서만 그 전술이 옳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오늘날 실천에서 이렇게 공동전선을 검증해 봐야 하는 부문은 단연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된 문제들과 정치적 부패에 항의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에게는 노동계급 운동 안에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요구를 진지하게 제기하는 사람들 모두를 가장 광범하게 단결시킬 가능성이 열려 있고, 혁명가들은 그런 기회를 붙잡으려 해야 한다.

그렇다고 혁명가들이 다른 세력이 먼저 행동에 나서기를 기다려야 한다거나 그들과의 지루한 협상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공동전선을 물신화해 독자적인 선제 행동을 미리 배제해서는 안 되며, 또한 초좌파 단체나 소종파가 관참은 주도력을 발휘해도 종파주의적으로 외면하지 말고 열의를 갖고 그 운동도 지지해야 할 것이다. 되도록 통합된 운동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말이다.

노동조합 이슈나 정치적 부패에 대한 항의 말고도 오늘날 공동전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정세에서는 이와 관련된 요구가 핵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일으키고 또 단결시키기 위한 우리의 역량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공동전선 안에서 혁명적 정당을 건설하려 하면 종파적인가?

전통적으로 공동전선은 두 가지 구실을 해야 한다:

- (1) 적절한 쟁점을 놓고 최대한 공동행동을 도모한다.
- (2) 혁명적 정치와 단체의 영향력을 키운다.

종파적 경향이 있는 단체들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예 공동 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공동 행동에 나서지만 다른 동맹 세력을 비난하는데 더 치중해서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낸다. 정반대로, 특정 운동에 녹아든 나머지 혁명가로서의 고유한 정치색을 잃기도 한다.

후자가 전자보다는 더 나은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오류이기는 매한가지이다. 혁명가들이 공동전선에서 정치색을 잃는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공동전선에 참여하면서 당을 건설하는 것을 ‘종파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전선의 두 기능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다. 오히려 그 둘은 서로 보완 관계이다. 왜냐하면 혁명가들이야말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선명한 이데올로기와 응집력 있는 조직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범한 운동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엽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을 일으키는 데서 다함께(노동자연대의 전신)가 한 구실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혁명가들이 공동전선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은 각기 다양한 운동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공동전선 기구들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그 나름의 민주적 절차를 갖춰 반드시 다양한 정치세력이 그 활동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전선’을 배후조종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런 방식은 오늘날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운동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그러나 모든 운동은 이런저런 정치강령들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운동이 이데올로기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자본이 사회를 지배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는 무엇

보다도 자본의 세계관을 사회에 침투시키고 그에 대항할 세계관의 발달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 개혁주의는 자본의 세계관과 혁명적 세계관을 절충한 사상과 운동이다. 이 때문에 공동전선은 언제나 이데올로기 투쟁과 정치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운동 안에 혁명적 세력이 강력한 한 축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안에서 자본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공동전선이 승리를 거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듯 혁명적 단체를 건설하는 것과 광범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 오히려 적절한 방식으로 혁명 조직을 건설한다면 운동은 더 강해질 것이다. 운동을 건설하

는 것과 그 운동 속에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조직을 키우는 일을 제대로 결합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참고문헌

Bobier, Faline, 'Peoples' Social Forum and the united front', <http://www.socialist.ca/node/2450>, 2014년 9월 6일.

Callinicos, Alex, 'Unity in Diversity', *Socialist Review*, April 2002.

Hallas, Duncan, 'On the United Front Tactic - Some Preliminary Notes', *International Socialism*, January 1976.

McKerrell, Nick, 'The united front today', *International Socialism*, Winter 2002.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최근 한미 간에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적 무기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론화해 추진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에 이어 러시아 정부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사드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 경쟁과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3월 12일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에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택을 비롯해 구체적인 배치 후보지도 언론에 흘러 나오고 있다. 필시 3월 27일 미국 합참의장 마틴 Dempsey의 한국 방문 때 사드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다.

4월에 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와 국무장관 존 케리가 잇달아 방한하고 4월 중순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도 열리게 돼, 이때 사드 배치 논의가 크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명분은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다.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밤에 편안히 잠들기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장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드가 겨냥할 표적은 북한만이 아니다. 오히려 주된 표적은 중국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2010년에 내놓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보고서》에서 중국의 미사일 증강을 “각별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2013년 미국 의회조사국이 내놓은 《아시아·태평양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보고서》도 한·미·일 MD가 “유사시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미사일 요격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D본색: 은밀하게 위협하게)》, 정옥식, 서혜문집)

오바마는 집권 초부터 경쟁 제국주의 국가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로 중심축을 이동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배치와 지역 동맹 구축·강화에 신경을 써 왔다.

평택 미군 기지

사드는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을 위한 주요 군사 수단이다. 중국은 특히 미사일 전력을 강화해 자국 연해 쪽으로 항공모함 같은 미국의 군사력이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려 한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MD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에 대응하려고 한다. 미국의 사드 배치에는 유사시 중국을 향한 발진 기지 구실을 할 평택 미군 기지 등을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또한 미국은 사드를 비롯한 MD를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강화하는 목적에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내세워 “한·미·일 3자 안보 토의(DTT)” 같은 3자 군사 협력을 강화해 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을 체결



경상남도 학생들에게 18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할 돈(약 2조 원)을 들여야 배치 가능한 사드 1포대.

결해, 한·미·일 3자 MD 구축에서 주요 걸림돌 하나를 제거했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제국주의 간 갈등을 키울 것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논의에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옹당 군사적 대응책도 마련할 것이므로, 사드 배치와 MD 구축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북한도 반발할 게 뻔하다. 미국의 전략 무기 배치에 대응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고 애쓸 것이다. 사드 배치를 계기로 북한이 중국한테서 최신 전투기를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발언들을 내뱉고 있다. 3월 17일 국방부 대변인 김민석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해서 협의를 요청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익 관점에서 우리 주도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다.” 사드 배치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중국·러시아 같은 주변 제국주의 국가들의 반발을 의식하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사드 배치 찬성 발언에 이어, 당 대표 김무성도 북한 핵 위협을 거론하며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비용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공산이 크다. 우선,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 비용의 분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양보할 태세가 돼 있다.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면 일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과 같은 방식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김민석). 복지는 줄이면서 위험한 무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데는 주저함이 없는 정부다.

KAMD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잘 구축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AMD 또한 미국의 MD와 불가분의 관계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미 미국의 MD 자산을 동원한 대북 공격 계획을 마련하는 데 합의한 바 있으며, 여러 차례 KAMD와 미국 MD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약속해 왔다.

이번에 방한한 미국 합참의장 마틴 Dempsey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통합된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

면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개별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를 마련하는 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고, 이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미사일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사드도, KAMD도 모두 반대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비롯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한반도는 미국(일본)과 중국이 벌이는 제국주의 간 경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친미 정책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

국익?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진보진영에서도 이 문제를 우려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사드 배치가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의 주된 문제점으로 한중 관계가 훼손돼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경제도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예컨대, 3월 19일 시민사회단체 1백여 곳이 연명해 발표한 사드 배치 반대 성명의 제목은 “정부는 동북아,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한중 관계 훼손하는 사드 배치 거부하라!”였다.(물론, 노동자연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명의 취지를 감안해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이 반발할 것이므로, 한중 관계가 훼손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한국 지배계급 내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견해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 점에 착안해 ‘국익’을 내세워 사드 배치를 반대하자는 게 운동의 지면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국익을 위해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우익의 주장에 일관되게 맞설 수 있을까? 우익은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근거가 또 다른 경쟁 제국주의 국가(중국)와의 외교 관계 훼손이라면, 일관되게 반제국주의 입장에 서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우파와 좌파의 차이는 국익을 위한 방법상의 차이가 돼서는 안 된다. 한국 자본주의가 경제와 안보에서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익 논리는 반전 운동의 방향을 지배계급의 한 분파에게 향하게 하거나, 계급적 이해 관계를 은폐시켜 반전 운동을 반자본주의와는 분리된 평화주의로 이끌리게 할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결국 제국주의 간 경쟁의 문제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의 최근 국면이며, 따라서 체제를 마비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저항이 제국주의에 맞선 근본 대안이다. “한중 관계 훼손”은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최대치로 동원하는 데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 될 것이다.

사드 배치를 비롯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한반도는 미국(일본)과 중국이 벌이는 제국주의 간 경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친미 정책도 이에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

낮은 임금과 해고에 맞서 싸우는 학교비정규직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 충북, 제주 등에서 식비 지급, 상여금 확대,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폐지 등을 보장받는 임금협약을 3년 만에 처음으로 맺은 것이다. 이는 지난 3년간 끈질기게 투쟁을 벌여 거둔 성과다.

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월 파업을 결정하고 조직하는 것에 압력을 받은 듯하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분부는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4·24 총파업 동참을 결정했고, 전국학비노조도 '4월 총파업으로 임금 인상을 쟁취하자'고 결정했다. 그러자 몽그적대던 교육청들이 합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천·대구·경북·울산교육청 등이 버티고 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진보교육감이 당선해 노동자들이 기대를 걸었던 곳이다. 그런데 인천교육청은 '박근혜 정부가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거나, '인천시의 재정 상황도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재정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보수교육감과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진보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노력한 노동자들의 실망만 키우게 될 것이다.

전국학비노조 고혜경 인천지부장은 "이천영 [인천] 교육감이 잘하는 말이 있는데, 전국에서 중간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4개 시도 교육청이 주겠다는 밥값도 못 주겠다고 한다. 이게



지난 3년간 끈질기게 투쟁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2013년 11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집회.

중간인가?" 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행보도 매우 실망스럽다. 교육감이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처우 개선 수준은 다른 곳에 견줘 낮을 뿐만 아니라, 잠실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돼 투쟁 중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끝까지 합의를 거부했다.

그런 점에서 다른 3개 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일반노조, 여성

노조)가 서울시 교육청과 합의한 것은 아쉽다. 다른 시도들이 대체로 더 높은 수준에서 타결한 것을 볼 때, 더 투쟁했다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총파업

아직 버티고 있는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4월 파업을 잘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서울, 경기, 충

남,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쟁취하는 데도 중요할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하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4대 요구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학교비정규직 직종 50여 개를 20여 개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직종 통합은 노동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인데 직무급제나 인력 구조조정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간 경험으로도 인력 총원이나 처우 개선 없는 직종 통합은 노동강도를 높이고 직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기 십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바꾼다는 정부 정책이 관철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인 호봉제는 더 요원해질 것이다. 정부의 기간제 연장 정책은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세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 요구를 관철하기가 더 어려운 조건이 형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총파업 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고 미타결 지역의 노동자뿐 아니라 타결된 지역의 노동자들도 연가, 총회 등의 방식으로 적극 총파업에 동참하는 게 장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투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니만큼(공무원노조도 연금 투쟁을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 파업에 동참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 공무원들과 함께 어깨 걸고 파업을 조직하면서 교육노동자들의 진정한 힘을 보여 주자.

조명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대학 분회 파업 예고

청소·경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과 고용 안정을!

올해도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생활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건국대, 숭실대, 연세대 등 여러 대학에서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졌다. 대학과 용역업체들이 무인경비시스템 등 신기술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당국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자 용역업체 입찰 가격을 낮췄고, 용역업체들은 다시 인원 감축 등의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불이 나거나 학생들에게 일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건 우리들이예요. 그런데 CCTV 몇 개 설치해 놓고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건 말도 안 돼요.”

“학생들이 줄었다고 하지만 청소해야 하는 건물은 똑같아요.”

최근 연세대학교는 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한 '신종 노동 탄압'을 벌이고 있다. 연세 세브란스 빌딩의 용역업체 소장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임금 30퍼센트 삭감을 강요했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3월 7일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청소 노동자.

노동자들은 형식상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의 사주가 돼 노동3권을 보장받지도 못한다. 이를 거부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들은 해고돼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생활임금도 노동자들의 주요한 요구다. 2010년부터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하고 투쟁하면서 법정최저임금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이런 성과로 현재 서경지부 소속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체 청소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18퍼

센트 정도 높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은 여전히 한국 노동자 평균 임금(2백40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심지어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시중노임단가(시급 6천9백45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 정부가 주라고 한 임금도 안 주고 있는 것이다!

“용돈벌이나 하려고 온갖 차별을 견디며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 이 돈으로는 최소한의 인

간다운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급 6천7백50원(5백50원 인상), 식대 12만 원(한 끼 당 3천 원), 단합에 고용 보장 조항(고용승계, 신기술 도입 등의 이유로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등) 삽입 등을 요구하며 서울지역 대학 14곳의 용역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고작 시급 2백 원 인상만을 영무새처럼 말할 뿐이고, 식대 인상과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진짜 사용자인 대학 당국도 용역업체 뒤에 숨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들은 “집단교섭 승리는 다른 무엇보다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며 투지를 다지고 있다. 3월 21일부터 대학 분회별로 진행하는 정의행위 찬반투표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해 압도적으로 가결하고 있다.

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를 더 극심하게 만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맞선

민주노총 파업에도 복무”하기로 했다. 서경지부는 4월 8일부터 3일간 부분 파업을 벌이고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청소 투쟁에서 학생들의 연대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로 임금 인상이 어렵다'며 학생과 학내 노동자들을 이간질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며 이런 이간질을 잘 막아 왔다. '등록금은 내리고 임금은 올려라'는 대학 청소 노동자 투쟁의 상징적 구호가 됐다. 올해도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대학생 네트워크'에 많은 대학 학생회와 학생운동 단체들이 참가해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성지현

함께 참가합시다!

청소·경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고용안정을
2015 청소·경비 노동자 대회
수도권 : 4월 8일(수) 16시, 서울파이낸스 앞
영남권 : 4월 11일(토) 14시, 울산 일산해수욕장 로터리 광장

지제크를 둘러싼 장정일과 이택광의 〈한겨레〉 논쟁

이슬람에 대해 그들 모두가 놓친 것

이수현 (이슬람주의, 계급, 혁명)(책갈피) 역자

최근 〈한겨레〉 지상에서 소설가 장정일 씨와 이택광 교수가 이슬람교에 대한 지제크의 견해와 이슬람주의에 대한 좌파의 태도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이하 존칭, 직함 생략).

장정일은 진정한 좌파라면, 샤를리에브도 사건에서 이슬람주의(‘정치적 이슬람’이라고도 한다)는 물론이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울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지제크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택광은 지제크의 좌파 비판이 주류 사회민주주의를 겨냥한 것이지 급진좌파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논쟁 과정에서 장정일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리더였던 고(故) 크리스 하먼의 책 《이슬람주의, 계급, 혁명》을 거론했는데(〈한겨레〉 인터넷 판에는 없고 인쇄본에만 나온다), 하먼의 책을 번역한 사람으로서 장정일의 짧은 언급이 원저의 핵심 주장이나 맥락과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택광의 반론 중에도 하먼의 비판 대상이었던 ‘이슬람주의=파시즘’론이 얼핏 보여서 몇 자 적는다.

장정일은 중동의 세속 좌파가 몰락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좌파가 세속 국가에 협력했을 때, 이슬람

세력은 그들을 ‘압제자들’, ‘이교도적’, ‘세속주의자’로 비난했다. 반대로 좌파가 이슬람주의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과 소수 종교 집단, 여성에 대한 좌파적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중동의 좌파는 세속 국가나 이슬람 운동, 양편으로 흡수되면서 공중 분해됐다.”

좌파적 가치

하먼의 책을 보면, 중동에서 이슬람주의가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세속 좌파의 주류였던 아랍 민족주의가 실패한 결과였다. 즉, 제2차세계대전 후 서방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중동 각국에서 아랍 민족주의 세력(예컨대, 이집트의 나세르)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장정일의 주장과 달리) ‘사회주의’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로 빚나가고,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보듯이) 원래의 미사여구와 달리 서방 제국주의에 대항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바람에, 이에 실망하고 환멸을 느낀 대중 속에서 이슬람주의가 점차 정치적 대안으로 부각됐다는 것이다.

이때 아랍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 둘 다의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던 스탈린주의나 마오쩌둥주의 좌파들은 이슬람주의를 모종의 파시즘이라고 비판하며 아랍 민족주의 ‘세속 국가’와 협력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적 몰락을 재촉하고 말았다.

그런데 오늘날 스탈린주의에 타협적인 지제크도 “이슬람 근본주의는 자유주의에 내재한 결합 때문에 발생한 파시즘적인 반응”(이택광)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고 하겠다(물론 지제크는 좌파가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세속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러나 무슬림 혐오에 맞서 무슬림을 방어하기를 꺼리면서 사실상 뒤편을 열어 준다).

요컨대, 중동의 세속 좌파가 “공중분해”된 것은 이슬람주의를 ‘비판’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국가에 협력한 것, 다시 말해 이슬람주의를 잘못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먼의 주장이다.

장정일은 좌파가 이슬람주의를 지지하려면 좌파적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먼의 핵심 주장은 중동의 세속 좌파가 이슬람주의에 종파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오히려 좌파적 가치 포기과 결부돼 있었고, 그 결과 오히려 이슬람주의가 득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주의에 대한 장정일의 태도는 따지고 보면, 중동의 세속 좌파가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장정일은 ‘계몽주의적 종교 비판’의 문제점을 중동의 좌

파와 공유하고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말이 그렇다.

“유럽·기독교 세계에는 마르크스가 있기 전에 ‘신은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말한 포이어바흐가 있었으나, 아랍·이슬람권에는 포이어바흐가 없었다. … 요점은 급진 좌파의 ‘급진’을 뿌리까지(radical) 사유하는 것이며, 그 끝에서 무신론을 만나는 것이다.”

“지상에 대한 비판”

불교가 무신론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무신론은 종교 비판의 ‘뿌리’도 ‘결론’도 되지 못한다. 또, 포이어바흐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유물론적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이른바 ‘인간학적 유물론’은 역사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서서, 종교 비판의 진정한 핵심은 “천상에 대한 비판을 지상에 대한 비판으로” 돌리는 것, 다시 말해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 자체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교는 천대받는 사람들의 탄식이요, … 대중의 아편”이라는 유명한 말은 현실의 고통이 힘겨울 때 사람들이 한숨 쉬며 그 고통을 덜어 줄 진통제를 찾듯이, 종교는 단지 사람들의 잘못된

관념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착취와 억압, 고통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그 현실을 바꾸는 것만이 진정한 ‘근본적’(radical) 종교 비판임을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지제크나 이택광이 “자유주의에 내재한 결합” 때문에 이슬람주의가 발생했고 그 “결합을 해소하는 방법은 자유주의 가치의 보편주의를 더 급진적인 좌파의 관점에서 전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근본적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리처드 도킨스의 책 《만들어진 신》에 대한 최일봉의 서평, “계몽주의 종교 비판의 한계를 보여 준 책”(http://wspaper.org/article/4420)을 참조하시오).

2003년에 이라크 침략을 기획하고 실행한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 전쟁광들의 기독교와 흑인 민권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서 킹 목사의 기독교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교리만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특정한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정치적 행동에 끌리게 되는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이나 맥락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 모색이 중요한 것이다.

※ 전문은 웹사이트(www.wspaper.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

전국 지부장들이 근속승진제 사수와 2단계 정상화 저지 투쟁을 강력히 촉구하다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 폐지를 3월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강하게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근속승진제는 철도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다. 철도노조를 민주화하면서 가장 먼저 쟁취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강제전보 폐지와 근속승진제였다. 사측의 전횡과 통제라는 굴레를 벗고 현장에서 제대로 숨쉬며 살기 위해서였다.

지금 정부와 철도공사가 근속승진제를 폐지하려는 목적도 바로 개인별 성과 평가를 부활시켜 현장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다. 저들은 근속승진제가 “경영진의 관리·통제력을 무력화”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근속승진제가 폐지되면 노동자 간 경쟁이 격화돼 노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래서 파업을 해서라도 근속승진제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런데 최근 김영훈 집행부는 ‘근속승진제 변경안’을 내놓았다. 각 직급별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할 때만 근속에 따라 승진하고, 일부는 개인별로 포인트(근속, 책임사고, 출결, 사회봉사 등)를 쌓아 승진하는 방식이다.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변경안’은 3월



사진 출처: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의 지부장들은 김영훈 집행부의 ‘근속승진제 변경안’ 폐기를 촉구했다 3월 26일 철도노조 전국지부장회의.

26일 열린 전국지부장회의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지부장들은 집행부 안이 근속승진제 폐지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평가의 요소가 포함되면 사측은 이를 이용해 얼마든지 전횡을 부리고 현장 노동자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시간 동안 김영훈 위원장과 현장 지부장들 사이에 날카롭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적지 않은 지부장들은 집행부의 양보안 제시가 합의 타결을 위한 수순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부장들은 거듭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올해는 지난해처럼 제대로 싸워

보지도 않고 정부와 사측이 내달라는 것을 내주는 양보교섭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목소리는 서울, 부산, 호남 지역의 전 직종에서 골고루 제기됐다. 이것은 철도 현장이 어렵고 조합원들이 싸울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 잘못됐음을 보여 줬다.

핵심 관문

또 지부장들은 사측이 근속승진제 폐지를 발판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속승진제 폐지는 철도에서 2단계 정

상화 추진의 핵심 관문이다. 2단계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개인별 성과를 승진, 임금, 심지어 퇴출에까지 연계하는 것이다. 근속승진제 폐지,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가 바로 그것이다.

지부장들의 항의에 부딪힌 김영훈 위원장은 당일 본교섭에서 ‘근속승진제 변경안’을 내리던 계획을 일단 포기해야 했다. 지부장들이 중요한 제동을 건 것이다. 이것은 2단계 정상화 공격을 앞두고 정부가 철도노조에 근속승진제 같은 중요한 공격을 관철해 기선을 잡으려던 것을 좌절시켰다는 점에

서도 의미가 적잖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김영훈 위원장은 지부장들이 압도적으로 ‘근속승진제 변경안’ 폐기를 촉구했는데도, 최종 결정권을 중앙집행위에 위임해 달라고 하고 이 안을 분명히 폐기하지는 않았다.

이번 전국지부장 회의에서도 확인됐듯이, 조합원들은 싸울 의지가 없는 게 결코 아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지 삭감 단협 합의를 부결함으로써 후퇴를 멈추고 사측의 공격에 대응해 가자는 의지를 보여 줬다.

올 초 오봉역 조합원들의 현장 투쟁부터 최근 서울기관차지부와 안산승무지부 등의 투쟁까지, 현장 조합원들은 사측의 여러 공격에 맞서 소중한 승리를 거두면서 사기를 회복하고 있다.

철도 활동가들은 사측의 추가 징계, 강제전출 등의 협박이 본격화되기 전에 단협 개악과 2단계 정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철도노조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함께해 다른 노동자들의 요구도 지지하며 자신들의 요구도 내걸고 싸운다면, 올해 철도 투쟁의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이정원

이렇게 생각한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대타협기구의 연장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야 한다

대타협기구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3월 27일, 공무원노조 집행부(김성광 사무처장)는 공노총, 교총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양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더 내는 방향으로 고충분담을 감수할 수 있다”며 기여율 인상 개약의 문을 연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현행 기여율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와 9퍼센트로 올리는 개약안을 내놓은 상태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또한 소득상한 하향조정,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장 문제 등에서도 양보 여지를 열었다.

이처럼 “개정 방향”과 그 내용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공무원연금 양보를 전제로 협상을 이어갈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내놓은 “개정 방향”, 즉 양보의 폭이 무엇이든, 그들은 그것조차 결코 지킬 수 없는 공무원연금 개약안 협상의 길로 본격 들어선 것이다.

이것은 연금 지키기를 원하는 공무원들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약을 막겠다고, 양보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 말은 180도 뒤틀린 것이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거나, 노조 공식 기구 논의나 의사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본부장들이 양보안을 내놓아서 안 된다며 기자회견 참석을 반대했는데도 이 위원장은 이를 무시했다. 지난 3월 25일 70명의 간부들(지부장



실질적인 파업을 조직하려면 더 이상 국회 논의에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26명 포함)이 대타협기구 탈퇴를 요구했는데도 이 역시 간단히 일축했다.

협상에 목 매달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들러리 기구임이 밝히 드러난 대타협기구를 박차고 나와야 하는 시점에서, 협상의 끈을 부여잡고자 스스로 양보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 결과 “실무기구” 구성 약속을 얻어냈다.

대타협기구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대타협기구가 도출하지 못한 “단일 합의안”을 실무기구를 통해 “반드시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대타협기구

가 사실상 연장된 셈이다.

그러나 실무기구가 도출하겠다는 단일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개약안일 수밖에 없다. 실무기구 테이블 위에 놓일 안은 정부와 새누리당 개약안, 새정치연합 개약안, 그리고 공무원 당사자 양보안으로, 어느 정도 개악하느냐 숫자 싸움만 남은 셈이다.

이 단일 합의안에서는 공적연금 강화 의제는 어음 발행만 하기로 이미 정했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아니라 사회적 기구 구성안만 담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대타협기구에 들어갈 때는 공적연금 전반에 관한 논

의를 한다는 등 명분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나 이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양보안을 철회하고, 오직 공무원연금 개약안 마련이 목적인 실무기구에서 나와서 개약 자체에 반대해 싸워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지키려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전투적 조합원들은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양보안을 철회하고 실무기구에서 나오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며 아래로부터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또,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의 의사를 거슬러 공무원연금 개약에 합의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독자적 투쟁을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약 합의 여부는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 전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약 합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한 가지 목적은 4·24 총파업 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공무원 연금 개약 합의에 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4·24 총파업의 주요 요구이기도 한 공무원연금 개약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

현장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파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최영준

민주노총은 4월 24일 박근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약 저지를 일차 목표로 삼고 총파업을 한다. 민주노총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요구인 공무원연금 개약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 전교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연맹들이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동참하

기로 했다.

지난 3월 25일 공무원노조도 투쟁본부(중집)에서 공무원연금 개약 저지를 내걸고 민주노총 4·24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했다.

연금 개약 저지 파업 찬반투표와 파업 일시 결정을 위임받은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민주노총 총파업 총투표 시기(3월 23일~4월 8일)인 4월 6~7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4월 24일에는 전 지부 조합원 총회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가 이 결정을 하기까지 공무원노조 안팎에서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이 있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한시적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 회원들과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양보를 전제로 한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할 것’을 제안했다. 하루 만나질 만에 지부장 26명을 포함해 70명이 넘는 현장 간부들이 이 제안에 서명했다.

같은 시기에 전교조 지회장 51명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타협기구를 탈퇴하고 전교조와 함께 투쟁할 것을 호소하는 입장을 발표했다.(관련 기사는 <http://wspaper.org/article/15610>을 보시오.)

이런 기층의 압력은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복무하기로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결정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더는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갉아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양보를 전제로 한 국회 실무협의체에서 나오도록 요구하며 기층을 조직해야 한다.

동시에 4월 6~7일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층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파업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